<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

언론의 시스템과 영향력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한국언론의 사이비 체질이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언론의 논조나 기사가 지나치게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도를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편집의 방향성이 없고 중심이 모호하며 냄비체질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마산에서 벌어진 「친자녀 손가락 절단사건」이다. 정신병자 한사람의 소행이니, IMF가 불러온 헤프닝이니 말하지만 사실은 매일 2-4면을 장식하는 「재테크」 기법 등 상업주의 언론의 책임이 크다. 돈버는 방법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최선이라는 가치관의 혼란은 가족사랑, 이웃사촌의 전통적인 가치관마저도 말살하고 마는 것이다.

경제정책이나 관련사건들이 터질 때도 지나치게 사건 중심적이며, 인기에 영합하는 시류 편향적인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그러했거니와 98년 들어서는 정부기구 축소 및 공무원 감원문제, 정리해고문제, 재벌구조 개편문제 등등 그때 그때 아주 능동적으로 시류를 타는 기사가 나가고, 논조가 흐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기구 개편 및 인원 감축문제가 불거졌을 때 언론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축소 및 감원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결과예측이 없었고, 개편 이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어물쩍 넘어가 중앙정부는 오늘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예나 다름없는 낭비구조를 답습하고 있고, 국가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어가는 장기비젼을 제시하기는 커녕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경제구조 재편과 정리해고문제도 어물쩍한 논조와 방향성 없는 기사로 지면을 메우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도 곁들여 있는 것 같다. 광고주인 재벌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음은 물론 스스로들이 정리해고 대상이기에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원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사문화돼 버렸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힘」 있는 집단 및 권력자들은 자의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IMF를 이유로 국민의 혈세는 마냥 새나가고 2000년대 한국은 「간접세 왕국」이라는 또다른 후진1위의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목적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터이다.

첫째, 은행구조 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조원의 세금이 사용됐으며, 앞으로도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문제이다.

재정경제부를 비롯 금융권 임직원들의 책임을 묻지않은 채 정부재정만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제기돼야 할 것이다.

둘째, 5대 재벌들의 「빅딜」 논의과정과 결과가 그들의 무모한 경영관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능동적인 자세전환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부실과 무책임을 봉합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및 재경부 관계자들이 「빅딜」이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성과주의로 일관한 때문일 것이다. 중소기업도 정부재정이나 국민세금을 지원받기 힘든 판에 국내 1-2위 재벌인 현대와 삼성이 수조원을 거저 지원해달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셋째, 정리해고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과 같이 개인이 잘살고 부자인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과 사치낭비에 대한 책임은 뒤로한 채 절대 해고당할 수 없으며, 국고지원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양심을 내팽개친 작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던가!

미국의 상업주의 언론과 상업적 법률관행이 「클린턴」을 사지로 몰아넣고 결국에는 국가위치를 흔들리게 만들었듯이, 한국언론의 상업성과 방향성 상실도 국가를 더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들의 국고탕진을 감시하고 지키는 것은 정도를 걷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다.

<화학저널 1998/9/28>